



프랑스 · 네덜란드 EU헌법안 부결의 영향과 전망

김 홍 중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hckim@kiep.go.kr, Tel; 3460-1036)

오 형 범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hboh@kiep.go.kr, Tel; 3460-1159)

주요 내용

- 5월 29일과 6월 1일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실시된 EU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동 법안은 큰 표차이로 부결되었음.
 - 부결의 이유로는 엘리트 주도로 이루어진 유럽통합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정치통합에 따른 국가정체성 상실 우려, 급속한 통합에 따른 생산물 및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최근 경제 부진으로 인한 정부의 인기 하락 및 터키 가입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혼재되어 있음.
- 동 헌법안의 부결로 유럽 정치통합뿐만 아니라 경제통합에서의 속도조절이 불가피함.
 - 이번 헌법안의 부결은 유럽통합의 핵심국가에서 유럽통합의 속도조절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해당국에서의 집권 정치 지형의 변화,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포함하는 정치통합의 속도뿐만 아니라 경제통합동맹의 유효성을 포함한 추가적인 경제통합 계획에 대해 재점검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음.
- 또한 이는 유럽경제의 구조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경제적 보호주의를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됨.
 - 헌법안의 부결이후 유로화 약세와 EU경제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나타남. 향후 재정 및 통화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뿐만 아니라 이번 투표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원국에서 대중영합주의와 경제적 보호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리스본 전략 등 유럽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의 추진은 어려움에 처할 것임.

1. 개요

- 5월 29일과 6월 1일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각각 실시된 EU헌법 국민투표에서 동 헌법안이 부결되었음.
 - 5월 29일 실시된 프랑스 국민투표에서는 69.7%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반대 54.87%, 찬성 45.13%로 반대표가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였음.
 - 이어 6월 1일 실시된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도 총 유권자의 63%가 참여하여 반대 61.6%, 찬성 38.4%의 큰 차이로 부결되었음.
 - 금번 네덜란드 국민투표는 공식 구속력이 없고 의회가 최종적인 비준여부를 결정하게 됨. 그러나 의회 주요 정당들은 투표율이 30%를 넘으면 국민의 뜻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됨.
 - 이로써 2004년 11월부터 EU 25개 회원국별 비준절차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EU헌법안이 부결되었음.

2. 부결의 원인

가. 급속한 통합에 따른 국가정체성 상실 우려

- 프랑스의 경우 EU 정치 통합이 가져올지 모르는 국가정체성의 상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음.
 - EU의 정치 통합이 가져 올 국가정체성의 상실에 대해 프랑스 (극)우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헌법안에 대한 거부를 주장하였음.
 - 특히 공동대외안보정책으로 인한 프랑스의 독자적인 외교정책의 상실은 17세기 이후 세계 정치사에 뚜렷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프랑스 외교정책의 소멸로 인식됨으로써 이러한 주장은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됨.

- 아울러 신드골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는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대통령은 대중의 우려에 대하여 헌법안의 부결은 프랑스의 재앙이라는 논리로 일관함으로써 설득력을 잃었음. 결국 전체 거부 투표자 중 45%는 국가정체성 상실을 우려한 우파의 주장을 지지하였음.
- 최근 일정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극우파들도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였음.
- 네덜란드 극우파는 지금까지 유럽통합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던 네덜란드가 헌법안을 부결 시킴으로써 오히려 EU내에서 네덜란드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였음.

나. 급속한 통합에 따른 경쟁 격화에 대한 우려

- 시장통합이 경쟁의 격화와 복지 후생의 악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우려가 폭넓게 공감대를 얻게 됨.
 - 프랑스 좌파들은 EU확대로 인해 동유럽의 값싼 노동력이 밀려오면서 프랑스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실업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여 대중의 우려를 증폭시켰음.
 - 최근 EU의 역내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에 있어 프랑스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역내 시장을 개방하면 서비스업체들이 인건비가 싼 동유럽으로 대거 이전(delocalisation)하고 동유럽 서비스회사들이 서유럽으로 밀려들어오는 ‘사회적 덩핑’ (social dumping)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 EU헌법이 발효되면 역내 자유시장경제가 강화되어 자국의 복지모델이 상실되어 프랑스의 사회보장 수준이 저하될 것을 우려함.
- 결국 2004년의 EU확대로 인한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이 노동시장의 교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확산시켜 EU의 심화를 의미하는 헌법안의 부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다. 경기침체에 따른 불만의 표출

-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현재 심각한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

- 프랑스는 2005년도 1/4분기 실질성장률이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실업률도 10.2%에 달하여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음.

표 1. 프랑스의 실업률 추이

(단위: %)

	2005 1월	2월	3월	4월
프랑스	10.1	10.1	10.2	10.2
EU25	9.2	9.4	9.3	9.0
EU15	8.3	8.5	8.4	8.2
유로지역	9.1	9.4	9.2	9.5

자료: Insee, Eurostat.

- 따라서 작금의 국민투표는 국민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였음.
-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2005년 1/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0.1%를 기록하였고 유로화 도입이후 물가 상승으로 얀 피터 발케넨데(Jan Peter Balkenende)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임.

표 2. 프랑스 및 네덜란드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04 2Q	3Q	4Q	2005 1Q
프랑스	0.6	0.2	0.7	0.2
네덜란드	-0.1	0.3	0.0	-0.1
독일	0.2	0.0	-0.1	1.0
유로지역	0.4	0.3	0.2	0.5
EU25	0.5	0.3	0.3	0.5

자료: Insee, Eurostat.

- 더욱이 안정성장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2004~5년 공공부문의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안정성장협약을 위반하고서도 오히려 동 기준의 완화를 이끌어낸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와 대비되어 네덜란드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줌.
- 네덜란드는 EU기금의 가장 큰 기여국으로서 EU확대 이후 순분담액 증가 등으로

인해 유럽통합 회의론이 우세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네덜란드의 EU기금 수혜액 대비 기여금 비율(2003년 기준)은 2.56으로서, 아일랜드(0.43)뿐만 아니라 독일(1.85), 프랑스(1.16), 그리고 영국(1.66)보다도 높음.

라. 기 타

- 이 밖에도 엘리트 정치에 대한 국민의 거부, 터키 가입 문제 등이 국민투표의 부결에 영향을 미쳤음.
 - 양국에서 모두 정치권, 언론, 학계 등에서 EU헌법안의 찬성을 주장하였는바, EU의 경제적 통합 심화 이후 경제적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어 온 일반 대중은 동 헌법안을 단지 국가주도세력의 논리로 받아들였음.
 - 지난 50여년의 EU통합의 역사에서 한번도 유럽 통합 이슈에 대해 집단적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네덜란드 국민은 동 헌법안 투표라는 최초의 기회를 통해서 유럽통합에 대해 잠재된 불만을 확실히 보여주하고자 하였음.
 - EU의 정치통합이 결국 터키의 추가 가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EU헌법안 가결이 곧 터키의 가입으로 갈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됨.
- 정치 통합에 대한 근본적 거부가 있음.
 - 유럽공동체는 과거에도 정치 및 안보 분야의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았음. 1954년 프랑스 의회는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ce Community: EDC)를 부결시킴으로써 유럽공동체의 공동 외교안보에 대해 제동을 건 전례가 있음.
 - 결국 유럽의 공동 정치·안보 정책은 50년 이상 통합이 진행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낮은 주제이고, 이에 대해 유럽통합의 두 핵심 국가의 국민들이 거부한 것은 유럽통합에 대한 ‘예기치 못한’ 재앙이나 후퇴라기보다는, 그 동안의 역사적 현실로 볼 때 ‘있을 수 있는’ 일로 해석됨.

3. EU헌법안의 주요 내용 및 경과

- EU헌법안은 의사결정방식의 효율화와 대통령 및 외무장관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음.
 - 2004년 6월 18일 채택된 EU헌법안은 중·동구 유럽 10개국의 신규가입에 따른 EU확대를 맞이하여 EU 의사결정방식을 효율화하고 대통령 및 외무장관 직을 신설하는 등, 정치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회원국 확대에 따른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을 억제하기 위해 EU이사회의 의사결정방식인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Voting: QMV) 제도의 적용분야를 확대시킴.
 - 이번에 채택된 가중다수결제도는 '단순이중다수결' (Simple Double Majority) 방식으로서 25개 회원국의 최소 55%(13개국) 이상이 합의하고 이들 찬성국가들이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할 수 있으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 EU의 대외적인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6개월 임기의 순번제 의장직 대신 2년 6개월 임기의 EU대통령(European Council President)을 신설하였고, 대외정책에서 EU의 통일된 의견표명을 하고 대외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무장관(Union Minister for Foreign Affairs)직을 둠.
 - 경제통화동맹(EMU)의 위상 강화를 위해 이를 공식 기구화 하였고, 유럽중앙은행(ECB)을 헌법상 기관으로 규정하여 독립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물가안정을 ECB의 주요 목적이자 EU의 목적 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명문화함.
 - 이 밖에 EU집행위 및 EU의회의 규모를 축소함과 동시에 그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통합의 가속화를 진전시킴.
 - EU집행위의 구성은 모든 회원국(25개국)에서 1명씩 집행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2014년 부터 전체 회원국 수의 2/3로 제한하여 15개국의 집행위원이 순번제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회원국 확대에 따른 EU의회의 의석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총 의석수를 750개 이내로 제한함.
 - 마지막으로 EU헌법안은 EU의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부여하는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EU차원의 국제기구 가입 및 의석 확보, 국제조약 체결 등 대외적 법률 행위가 가능하도록

록 하였음.

- EU헌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EU 25개 회원국 전체의 비준이 필요함.
 - 각 회원국은 개별적 선택에 의해 국내법에 따라 의회비준이나 국민투표를 통해 EU헌법안에 대한 비준절차를 진행함.
 - 프랑스 및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총 10개국에서 비준절차를 완료함.
 - 리투아니아(2004년 11월), 헝가리(12월), 슬로베니아(2005년 2월), 이탈리아(4월), 그리스(4월), 오스트리아(5월 11일), 슬로바키아(5월 11일), 독일(5월 27일), 라트비아(6월 2일)*는 의회표결을 통해 비준함.
 - * 라트비아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가 부결된 직후인 6월 2일 의회표결을 통해 찬성 71, 반대 5, 기권 6으로 EU헌법안을 압도적으로 비준함.
 - 스페인은 금년 2월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EU헌법안을 비준함.
 - 현재 비준절차가 진행 중인 벨기에는 의회의 비준을 완료하고 5개 지방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 나머지 12개국들은 내년 10월까지 비준절차를 완료할 예정임.
 - 의회표결을 실시할 예정인 국가는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스웨덴, 핀란드, 몰타 등임.
 -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국가는 룩셈부르크(7월 10일), 덴마크(9월 27일), 폴란드(10월 9일 계획), 포르투갈(10월), 아일랜드(2006년 초), 영국, 체코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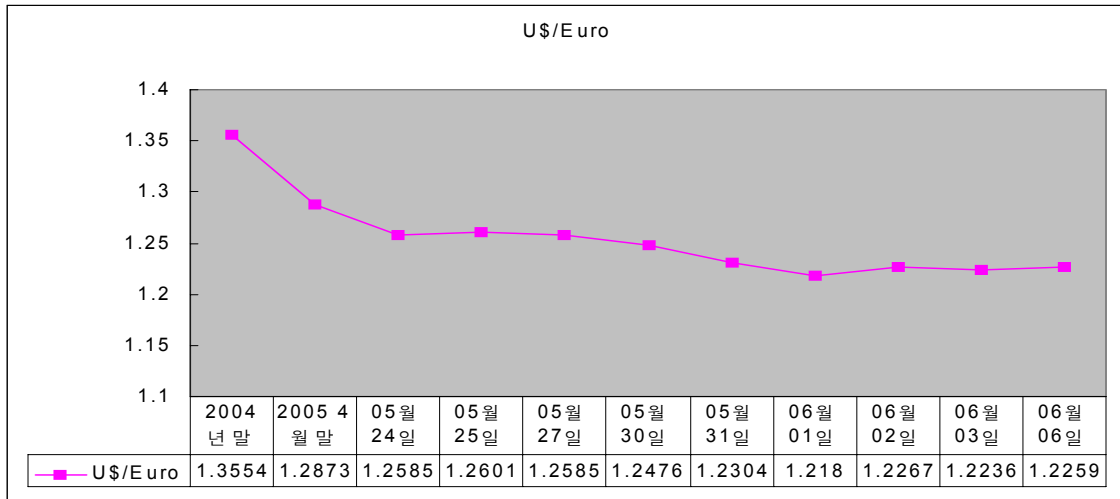
4. 프랑스 · 네덜란드 국민투표 부결의 영향

- 25개 국가 중 한 국가라도 비준하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는 EU헌법은 동 법안에 대한 프랑스 및 네덜란드의 연속적인 부결로 인해 좌초 위기에 직면하였음.

- EU헌법안은 그 동안의 경제통합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정치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금번 부결 사태로 인해 통합속도의 조절이 불가피해 짐.
- 더욱이 유럽통합의 초기멤버로서 유럽통합을 주도해온 프랑스와 유럽통합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던 네덜란드에서 큰 표차로 동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EU의 정치통합에 대한 회의감이 증폭되고 있음.

■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 부결은 유로화의 약세를 가져오고 있음.

그림 1. 유로·달러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com

- 5월 29일 프랑스 국민투표가 부결된 후 30일 달러화 대비 유로화는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음.
- o 작년 10월 16일 유로당 1,2394달러를 기록한 이후 30일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1,2476달러에 거래됨.
- o 이후 5월 31일 1,2304달러로 약간의 반등세를 보이다가 6월 1일 네덜란드의 국민투표 부결 여파로 1,2180달러까지 폭락하였고, 6월 2일 이후 현재까지 1.22 달러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임.
- 유로화 가치는 프랑스 국민투표 여론조사에서 EU헌법안에 대한 지지도가 점점 하락하고 유로지역 경제의 고전을 예상하는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5월에만 5.4%가 하락하였음.

- 2004년까지 강세를 보이며 기축통화인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던 유로화는 유로지역 경제둔화에 따라 2005년 들어 7%나 떨어지며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실업률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일본과 2005년 1/4분기 GDP성장률을 상향조정한 미국과는 반대로 유럽경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
- 여기에 프랑스 및 네덜란드의 EU헌법안 부결이라는 정치적 혼란까지 가중되면서 EU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대되고 있음.
- 더욱이 6월 2일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 유로지역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6%보다 낮은 1.4%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하여 유로지역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한 유로화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 한편 장-클로드 트리셰(Jean-Claude Trichet)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프랑스 및 네덜란드의 EU헌법안 부결로 인해 유로화가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라고 일축함.
 - 프랑스 국민투표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부결 가능성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유로화를 매각했을 가능성이 큼.
 - 한편 EU집행위도 최근의 유로화 하락은 국민투표 부결의 영향이라기보다 산업부문의 신뢰도 저하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임.
 - 또한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이 기준금리를 3%까지 상승시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의 2%와 1%포인트 격차가 발생하여 유로화는 미국과 EU간 이자율 차이 및 양 지역간 성장률 격차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임.
- 금번 부결로 인해 유로지역 경제는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EU경제의 신뢰도, 구조개혁, 재정 및 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ECB 트리셰 총재는 현재 유로지역이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으며 현 상황에서는 신뢰도(confidence)의 제고가 핵심으로, 이러한 신뢰 구축 및 유지를 위해 유로지역 국민들이 ECB 및 유로화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함.
 - 중장기적으로 EU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리스본 전략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이 부결로 인해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이 고조되고 있음.

- 프랑스의 EU헌법안 비준 반대운동에서 유권자들은 세계화와 EU확대가 가져올 실업에 대한 불안과, EU 관료들이 프랑스의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개악하려 한다는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구조개혁이 인기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냄.
- 경제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의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임.
- 이들 국가들은 지난 몇 년간 안정성장협약 기준인 GDP대비 3%를 위반해 왔음.
- EU헌법안의 부결로 정치인들은 정책적으로는 신중하지 못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인기 있는 재정정책들, 즉 감세, 복지지출의 확대,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개혁의 보류 등을 펼칠 유인이 많아짐.
- 더욱이 3개국 모두 2년 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정치적 압력이 거셀 전망이다.
- 프랑스의 경우 좌·우파 모두의 반대가 확인됨에 따라 정치적 안정을 지속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프랑스에서 헌법안에 대한 반대를 이념적 성향으로 보면 좌우파가 중도파를 공격한 형상임.
- 극좌와 극우의 90%가 반대하였으며, 우파국가주의자정당의 75%, 공산당의 98%, 녹색당의 60%, 사회당 지지자의 56%가 반대하여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의 80%, 중도우파 프랑스민주연합(UDF)의 76%가 찬성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룸.

표 3. 프랑스 정당별 EU헌법안 반대비율

(단위: %)

좌파		중도파			우파	
공산당	녹색당	사회당	UMP(집권당)	UDF	국가주의	국민전선
98	60	56	20 이하	24 이하	75	90

자료: Economist, June 4, 2005에서 재구성

- 더구나 헌법안 부결이후 시라크 대통령은 집권당 내부의 정치역학에 따라 대중적인 이미지의 사로코지(Sarkozy) 장관보다는 선출직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엘리트주의자인 드빌팽(De Villepin) 전 외무장관을 수상으로 기용함으로써 투표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이로써 2007년으로 예상되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에서는 시라크-드빌팽-사르코지의 삼각구도가, 좌파 사회당에서는 올랑(현사회당 당수) - 파비우스(전 수상)간의 권력투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10월 EU 가입협상이 시작될 예정인 터키의 가입전망이 불투명해짐.
 -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EU통합 반대 여론에서 드러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반이슬람 정서였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인 터키는 EU확대의 마지노선으로 드러났으며, 터키는 기존 회원국들의 정치적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 따라서 이르면 2015년경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터키의 EU 가입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짐.

5. 향후 전망

- EU지도자들의 거듭된 EU헌법안 비준 강행의사에도 불구하고 헌법안 비준 절차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됨.
 - EU 순번의장인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룩셈부르크 총리를 비롯한 EU 지도자들은 금번 프랑스의 부결이 EU헌법의 사망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들의 비준 절차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EU집행위는 프랑스 및 네덜란드 부결 이전 5월 27일 최종 비준한 독일까지 이미 9개국 2억 2,200만 명(49%)이 EU헌법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EU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찬성을 표시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함.
 - 그러나 프랑스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EU헌법이 부결되자 EU헌법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비준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영국 외무장관 잭 스트로(Jack Straw)는 6월 6일 하원 보고에서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 부결의 영향이 명확해 질 때까지 영국은 내년 중에 실시할 계획이었던 국민투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함.

- 영국은 EU의 권한확대로 인한 주권축소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 EU헌법 국민투표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왔음.
- 이번 연기 결정으로 EU헌법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현재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덴마크, 체코, 폴란드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프랑스의 부결 이전부터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호세 마누엘 바로수(Jose Manuel Barroso) EU집행위원장은 다른 대안(Plan B)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관되게 지적해 왔지만, 현재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음.

가. 국민투표의 재실시 案

- EU 회원국들과의 재협상을 통해 EU헌법 조항을 대폭 수정하거나 부결된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헌법조항에 추가하여 국민투표를 재실시하는 경우임.
- 과거 덴마크와 아일랜드가 각각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년)과 니스 조약(2001년) 부결시킨 후에 양국은 자국의 주장을 조약에 반영한 후 국민투표를 재실시하여 각 조약의 비준을 통과시킨 바 있음.
- 덴마크는 이민, 국방, 유로화에 대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선택적 탈퇴(opt-out)조건을, 아일랜드는 니스 조약이 EU의 군사동맹에 참가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조약에 반영시킴으로써 재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음.
- 그러나 동 안의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임. 왜냐하면 EU헌법안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다다르기 위해 무려 3년여의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재차 협상에 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나. 비준한 국가만으로 EU헌법의 발효를 추진하는 案

- EU헌법을 부결한 국가들은 EU 정치통합에서 탈퇴시키고 비준에 성공한 국가들만이 EU헌법을 채택하여 발효시키는 경우임.
- 그러나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유럽통합의 최초 6개국(Original Six)이었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네덜란드, 나아가 영국과 기타 국가들까지 제외시킨 EU헌법안이 얼마나 EU를 대표할 지는 의문시됨.

다. Multi-speed Europe 案

- 장기적으로 프랑스 및 네덜란드의 EU헌법 부결은 12개국만이 참가하고 있는 EMU나 13개국이 가입한 쉐젠(Schengen) 협약의 경우처럼 'multi-speed' 구조로 나아갈 수 있음.
- 즉, EU가 '유럽핵심국' (core Europe)을 중심으로 보다 확대된 영역에서 통합을 이어나가고 나머지 국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부문에만 참여하는 형태임.

라. 부분적 채택(cherry-picking) 案

- EU헌법 조항 중 민감한 내용을 제외한 일부만을 선택하여 기존 헌법보다 내용이 삭감된 EU헌법을 채택하여 발효시키는 것임.
- 예를 들어 제도에 관한 사항만 집중적으로 명시한 헌법으로, 이중다수결제도와 EU대통령 및 외무장관직 신설에 관한 조항들을 부분적으로 되살려 발효시키는 것임.
- 그러나 동 안은 회원국간 정치적 혼란과 논쟁을 재연시킬 수 있으며, 최종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어려움이 있음.

마. 현상 유지(status quo) 案

- 프랑스 및 네덜란드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EU는 니스 조약 등 기존 조약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EU 25개 회원국간 EU헌법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합의될 때까지 시간 벌기에 들어갈 수 있음.
- 영국의 국민투표 추진 연기 발표 이후 바로수 EU집행위원장은 현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EU회원국들이 '숙고할 시간' (time of reflection)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현재 동 안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EU 정상들이 부결 투표에서 드러난 유권자들의 반대의사를 어느 정도 수용하여 EU헌법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실정임.

표 4. 가능한 대안들 (Plan B)

	주요 내용	과거 사례	현실성 여부
국민투표 재 실시	재협상을 통한 헌법안 수정 내지 부결된 국가의 특수 상황을 헌법조항에 추가 후 국민투표 재 실시	덴마크(1992년), 아일랜드(2001년)는 자국의 주장을 조약에 반영 후 국민투표 재 실시	희박
비준한 국가만으로 EU헌법 발효	부결국가를 탈퇴시키고 비준한 국가들만으로 EU헌법 발효	-	희박
Multi-speed Europe	유럽핵심국을 중심으로 통합을 이어나가고 나머지 국가들은 원하는 부문에만 참여	EMU와 쉐겐 협약	정치적 결단 필요
부분적 채택 (cherry-picking)	민감한 내용을 제외한 일부만을 선택하여 EU헌법을 채택	-	재협상의 어려움
현상유지 (status quo)	기존 니스조약을 유지해 나가면서 향후 결정을 위한 시간적 여유 확보	-	가능성 높음

- 향후 EU의 정치·안보 통합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임.
- 이번 EU헌법안의 부결은 과거 유럽방위공동체 조약에 대한 부결 사태를 떠올리게 하면서 정치·군사적 통합 시도가 갖는 한계를 보여줌.
- 1954년 프랑스 하원이 유럽 6개국의 군사 유대를 강화하려는 EDC조약을 부결시킨 바 있음. 이 사건으로 EU 각국 지도자들은 경제에 초점을 두어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를 창설했으나, 이후 유럽공동방위 정책에 대한 시도를 재개하기까지 약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름.
- 따라서 금번 EU의 정치적 통합 시도 또한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음.
- 일부에서는 기존 EU회원국과 신규회원국간의 의견대립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기존 EU회원국들은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되살아나는 반면, 신규회원국들은 친기업 및 친시장주의를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상반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신규회원국간 의견대립이 심화될 수 있음.

- 2010년까지 유럽을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로 만들고자 하는 리스본 전략은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됨.
-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서 각국 정부는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반감을 확인하였음. 프랑스의 사르코지 현 내무장관은 기업의 해외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표출한 자유무역과 앵글로-색슨식 자유주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함.
- EU회원국에서 대중융합주의와 경제적 보호주의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구조개혁을 골자로 하는 리스본 전략은 그 추진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 역외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확인된 세계화에 대한 반감 및 역내 사회복지체계의 유지에 호응하기 위해서 주요국 정부는 제3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 가능성이 높음.
- 이미 올해 초부터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중국산 섬유제품 수입이 급증하자 EU집행위에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음. 향후 제3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EU는 철강제품을 포함한 한국산 제품 9건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DRAM 1건에 대해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EU헌법안의 부결은 추가 덤핑조사 중인 1건의 덤핑 판정과 전자저울 등 3건에 대한 기존 반덤핑 규제 시한 종료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달 16-17일에 열리는 정례 EU정상회의(EU이사회)는 현 위기를 타개할 중요한 시점으로서, 회원국 정상들이 EU헌법의 미래에 대해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최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지난 해 EU 정상들은 EU헌법안의 서명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1개 또는 몇몇 국가가 헌법 비준에 실패한 경우 EU이사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EU헌법 부속선언 제30조에 명시한 바 있음.

- 따라서 이번에 열리는 EU이사회에서 EU헌법 비준 문제가 핵심의제로 다뤄지게 될 것이며, 동 회의의 결과에 따라 EU헌법의 미래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됨.